

# 김정일 행정법 강의계획서

“행정법 각 기본서의 수험적합적인 이론과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중요사례 및 기출문제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수록한  
트리니티 행정법의 집중학습과 주요사례에 대한 정확한 풀이를 통해  
고득점 답안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틀을 완성할 수 있는 강의!”

## ■ ■ 담 당 김 정 일 변호사

- 사법시험 제40회 최종합격
- 법무법인 백범 변호사
- 現)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

## ■ ■ 강의일정 2018년 8/10(금) ~ 9/3(월), 총 21회

### ■ ■ 시 간 [오후 실강반]

- 1) 1시간 복습시험 : 1시 ~ 2시 ※ 주 2회(1시간, 50점) 복습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 2) 강의시간 : (시험 있는 날) 2시 10분 ~ 5시 50분 / (시험 없는 날) 1시 40분 ~ 5시 50분  
※ 1:1 Q&A 및 답안첨삭은 매일 저녁 6시 ~ 7시까지 2층 심층상담실에서 진행합니다.  
또한 [kji7304@daum.net](mailto:kji7304@daum.net)로도 질문 가능합니다.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 저녁영상반]

- 1) 1시간 복습시험 : 6시 ~ 7시 ※ 주 2회(1시간, 50점) 복습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 2) 강의시간 : (시험 있는 날) 7시 10분 ~ 10시 50분 / (시험 없는 날) 6시 40분 ~ 10시 50분

### [익일 오전영상반]

- 1) 1시간 복습시험 : 8시 ~ 9시 ※ 주 2회(1시간, 50점) 복습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 2) 강의시간 : (시험 있는 날) 9시 10분 ~ 12시 50분 / (시험 없는 날) 8시 40분 ~ 12시 50분

- ■ 강의교재 트리니티 행정법 총론(김정일, 서점구매) + 행정법 각론 자료(무료제공)  
1순환용 행정법 사례정리자료(무료제공) + 행정법 사례풀이의 방법자료(무료제공) +  
답안지 형식의 핵심암기 쟁점자료(무료제공) + 출제 가능한 최신판례자료(무료제공) +  
매일하는 행정법 복습자료(매회제공) + 시험용 법전(서점구매)  
※ 실강반에도 필기자료가 제공되며, 수업 참여 시 반드시 법전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 교재특징 1. 트리니티 행정법 총론

첫째, 각 쟁점별로 기출문제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수록하여 출제방향 및 답안작성요령을 완벽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사례풀이방법에 대한 팁 등을 날개 형식으로 편집하여 본문내용과 보충설명을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행정법의 이론과 판례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어 전체내용에 대한 유기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셋째, 각 쟁점별 중요도와 기출문제의 출제빈도 등을 별표로 표시하여 중요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최신판례와 개정된 각 교수님의 기본서 중 변경된 내용이나 추가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트리니티 행정법은 다양한 출제패턴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행정법의 모든 중요 학설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한 수험서입니다.

따라서 매년 5급 공채 행정법 시험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2019년에도 행정법 시험문제가 트리니티 행정법에서 벗어날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감히 자부합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빠르게 반복하여 회독수를 늘리신다면 행정법 고득점도 충분할 것입니다.

## 2. 1순환용 행정법 사례정리자료

정식출간된 행정법 연습사례집 중 1순환에서 확인해야 할 사례들을 선별하여 자료로 제공합니다.

2, 3순환에서도 각 순환에 맞는 사례를 풀이하므로 3순환이 종강할 때면 중요한 사례를 모두 풀어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3. 행정법 사례풀이의 방법자료

수년간 5급공채 기출문제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모든 사례문제는 이 자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료를 열심히 학습하고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누구보다 행정법이 자신 있는 고득점 과목이 될 것입니다.

## 4. 답안지 형식의 핵심암기 쟁점자료

효과적인 주요내용 학습과 답안지 적용을 위해 행정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하고 암기해야 할 내용을 요약하여 답안지 형식으로 편집한 자료입니다. 트리니티 행정법으로 1순환 강의를 수강한 후 핵심암기 쟁점자료를 복습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강의계획서 뒷면의 샘플 참조)

### ■ 강의특징

#### I. 실전을 위한 답안지 작성법을 정확히 습득

1. 모의고사와 답안작성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을 고려하여, 1~2회차에는 법전활용법과 소송구조 개관 및 답안 작성방법에 중점을 두어 강의합니다.(수업 참여 시 반드시 법전 지참)
2. 모의고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답안지를 서술할 수 있도록 행정법에서 반드시 숙지하여 암기해야 할 내용들을 답안지 형식으로 요약한 핵심암기 쟁점자료를 제공합니다. 실제 답안지에 서술할 내용으로 압축한 자료이므로 1순환 수강 시 트리니티 행정법으로 강의를 수강한 후 핵심암기 쟁점자료를 활용하여 복습하고 반복적으로 암기하시면 답안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주 2회 복습모의고사를 진행하며, 소정의 답안지를 직접 채점하여 수강생의 입장에서 답안작성 시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답안작성 관련 중요한 사항은 수업시간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론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답안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언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4. 답안작성 연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점된 답안지 중 참고할만한 답안지를 최고답안 외에 추가로 직접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5. 매일 강의 끝난 후 1시간동안 1:1 Q&A 및 답안작성 관련 상담을 진행합니다.  
(6:00~7:00, 2층 심층상담실에서 진행)

#### II. 행정법 기본이론의 확인을 통한 심화이론의 적용과 사례연습

1. 트리니티 행정법을 통해 고득점 답안작성에 필요한 중요이론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하는 교수님 기본서의 중요내용은 강의시간 중 언급함으로써 예습, 복습 시 기본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안해결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중요이론의 확인과 관련 사례에 대한 풀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강의**합니다.
3. **매회 학습한 내용에 대한 복습자료를 제공**하여, 그날 배운 내용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강의목표** ※ 1순환 강의의 목표는 원론강의나 예비순환을 통해 학습한 **기본서의 중요내용을 복습하면서 사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 평면적으로 공부해왔던 기본서의 내용들이 실제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례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여 **판례의 논리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학습한 이론을 구체화하여 사례에 적용하고,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첫째, **기본서의 중요내용과 기본서에 기재된 주요판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하여 강의**합니다.

둘째, 트리니티 행정법에 포함되어 있는 **5급공채 기출문제와 중요사례문제를 자세하게 풀이**하여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강의는 **행정법 이론 설명(60%), 사례문제풀이 및 판례해설(40%)로** 진행합니다.  
(여러분은 1순환 강의일정 동안 강의내용의 복습용으로 제공해드리는 **행정법 사례풀이의 방법자료와 핵심암기 쟁점자료를 반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의 중 알려드리는 교수님 교과서 속지 부분은 예습, 복습 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년간 5급공채 시험에서 입증된 것처럼 1, 2, 3 순환 모의고사 및 사례풀이에서 푼 문제들이 그대로 시험장에서 출제되었던 바<sup>1)</sup> 이번 **모의고사문제(주, 2회 시행)**는 **최근 기출경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아래, **최신판례를 사례화한 문제와 최신 대학 모의고사 등을 검토한 문제를 출제**하여 내년에도 꼭 모의고사가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018년 5급공채 기출문제 논점인 처분사유추가변경, 행정지도의 처분성인정여부,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심판, 임시처분, 시보임용과 정규공무원임용취소에 관한 판례는 제 행정법연습 및 2018년 3순환 모의고사에서 거의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의회차	날짜	강의내용	출제가능논점
■ 제 1 회	8/10(금)	행정법 전체체계, 행정소송 전체개관 I	
■ 제 2 회	8/11(토)	행정소송 전체개관 II	
■ 제 3 회	8/13(월)	실질적 의미의 행정 ~ 자기구속원칙까지	법률유보원칙(B), 자기구속원칙(A)
■ 제 4 회	8/14(화)	비례원칙 ~ 공무수탁사인까지	비례원칙(B), 신뢰보호원칙(A), 소급입법(A), 공무수탁사인과 국가배상(B)
■ 제 5 회	8/15(수)	공권 전체	공권의 확대화 경향(B),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B)
■ 제 6 회	8/16(목)	특별행정법관계 ~ 공법상 부당이득까지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B),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범리(B),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B), 신고(A)
■ 제 7 회	8/17(금)	행정입법 I	법규명령의 한계(A),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A)
■ 제 8 회	8/18(토)	행정입법 II	행정규칙의 법적성질(C),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A), 법령보충규칙(A)
■ 제 9 회	8/20(월)	행정행위의 의의 ~ 강학상 하명까지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A),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A), 판단여지(B), 가행정행위(B), 사전결정(A)
■ 제 10 회	8/21(화)	강학상 허가 ~ 강학상 부관까지	제재처분의 승계(A), 재건축(A), 기본행위와 인가 상호관계(B), 부관의 종류(B), 부관의 가능성과 일반적 한계(A),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A)
■ 제 11 회	8/22(수)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까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A),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B)
■ 제 12 회	8/23(목)	행정행위의 하자의 예 ~ 행정행위의 실효까지	하자의 승계(A), 하자의 치유(B),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A), 직권취소의 제한 및 취소의 취소가능성(A), 철회의 가능성 및 철회의 제한(A)
■ 제 13 회	8/24(금)	확약 ~ 행정계획까지	확약의 구속력(B), 행정계획의 법적성질(B),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원칙(A), 집중효와 인허가의제제도(A), 계획보장청구권(B)

■ 제 14 회	8/25(토)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까지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항(A), 이유부기의 하자(A), 불이익처분절차(A),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인지(A), 비공개사유(B), 정보공개와 권리구제(A)
■ 제 15 회	8/27(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국가배상 I	대집행(A), 과징금(A), 위반사실 공표(B), 관허사업제한(C), 즉시강제(B), 행정조사(A)
■ 제 16 회	8/28(화)	국가배상 II	법령위반의 의미(A),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A), 선결관계(B), 공무원개인의 민사책임(A), 이중배상금지(A), 국가배상책임자(A), 자동차운행책임(B), 영조물책임(A)
■ 제 17 회	8/29(수)	손실보상, 행정심판	보상규정없는 경우 구제방법(A), 희생보상(C), 수용재결에 대한 권리구제(A), 의무이행심판(A), 임시처분제도(A), 행정심판의 재결(A)
■ 제 18 회	8/30(목)	행정소송 I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A), 변경처분시 소의 대상(A), 제3자 원고적격(A), 협의의 소익(A)
■ 제 19 회	8/31(금)	행정소송 II	제소기간(B), 집행정지(A), 처분사유추가변경(A), 위법판단기준시(A)
■ 제 20 회	9/1(토)	행정소송 III	취소확정판결의 제3자효(B), 기속력과 간접강제(A),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A), 부작위위법확인소송(A)
■ 제 21 회	9/3(월)	행정법각론 전반	행정조직법(C), 공무원법(A), 지방자치법(A), 경찰행정법(A), 공물법(A), 공용수용 및 공용환권(A), 공시지가제도(B)

# 순수한 사실행위의 처분성인정여부

## I.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에 대하여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II. 학설

①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라는 점에서 처분과 행정행위는 일치된다는 일원설(실체법적 개념설), ② 법문언상 처분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보다는 처분의 개념이 넓다는 이원설(쟁송법적 개념설), ③ 법문언상 처분의 개념이 행정행위보다는 넓게 규정되어 있으나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행위로 국한할 수 밖에 없다는 학설 등이 대립.

## III. 판례

판례는 기본적으로 일원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작용도 처분성을 인정하여 처분성을 확대. 다만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부정.

## IV. 검토

①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이나 사정판결제도 등을 볼 때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인데 형성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사실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법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 ② 사실행위를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포함시키면 사실행위에 공정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 ③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있다는 점, ④ 제소기간 등의 제한이 생겨 오히려 국민의 권익구제에 미흡하다는 점, 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적 행정지도 등 사실상 강제력 있는 사실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는 이원설은 타당치 않다.

다만 당해 사실행위가 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②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위법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는데 ③ 이에 대

1 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이러한 행정작용까지 처분성을 부정하  
2 면 그러한 행정작용으로 권익침해를 받은 국민이 소송을 통해 다룰 수  
3 없게 되는 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국  
4 민의 권익구제확대를 위해 위와같은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그 밖에 이  
5 에 준하는 작용’으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6 결국 판례입장이 타당하다.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권사의 처분성인정여부

## I.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II. 학설

① 수인하명과 집행행위가 결합된 합성행위이므로 처분성 인정하는 견해, ② 이원설 입장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는 아니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으로서 처분성 인정하는 견해, ③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는 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처분성 인정하는 견해, ④ 통지의 결여 등을 이유로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 등이 대립.

## III. 판례

대법원은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질을 갖는 단수조치나 교도소 이송조치, 교도소장의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의 지정 등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또 헌법재판소도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 IV. 검토

판례나 학설이 권력적 사실행위로 예를 드는 행위들은 대부분은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수인의무를 발생시키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수인하명과 물리적 집행행위가 결합된 합성행위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결국 권력적 사실행위는 수인하명이라는 행정행위 요소가 있는 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나 수인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처분에 포함시키면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등이 준용되지 않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생겨 오히려 국민의 권익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판단여지

## I. 판단여지의 의의

요건이 불확정개념이고 고도의 전문영역이나 가치평가영역인 경우에는 행정부에게 요건판단에 있어서 인정되는 일정한 범위의 자유.

## II. 판단여지의 인정근거 -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경험 존중

## III. 판단여지와 재량의 구별에 관한 학설과 판례

판례와 일부학설은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하지 않고 판단여지영역을 재량으로 보고 있으나 다수설은 판단여지와 재량을 구별.

생각건대,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요건판단은 예견가능해야 하므로 재량문제일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설이 타당.

## III.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이나 고도로 정책적인 판단 및 예측 판단에 속하는 불확정개념의 적용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 IV. 판단여지의 한계

① 명확히 법을 위반하거나, ② 사실의 인정을 잘못했거나, ③ 판단 기관구성의 위법, ④ 법에 정한 절차규정 위반, ⑤ 명백히 판단을 잘못한 경우에는 위법